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눈물



홍행기 사회부장

의 감사 인사를 들으신 후 위로함. -김소형 : (울먹이면서) 아까 제가 너 무 세계 꺼안았죠. 우리 아빠 같아요. 제가 아빠 많이 닮았지요. -문 대통령 : 아버님께서 송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찾아뵙고 하셨습니다. 오늘 국민 앞에서 제대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힘든 일 다 극복하시고.

호남의 한 끌어안은 대통령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는 2~3명의 기자가 전국의 기사를 대표해 대통령을 밀착 취재한다. 이른바 '풀(pool) 기자단'인데,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두 명의 기자가 문 대통령의 일기수일투족을 취재했다.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취재 내용은 전체 기자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담당 데스크이다 보니 기념식이 끝난 뒤 후배기자들이 보내 온 '풀 기자단 메모'를 읽게 됐는데, 하마터면 또다시 눈물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소형 씨를 뒤따라가는 걸 보며 '설마'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소형 씨를 꼭 끌어안는 걸 보는 순

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소형 씨가 대통령을 꼭 끌어안은 채 영영 우는 장면에선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고, 소형 씨 아버지의 묘소를 찾은 대통령이 유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글로 쓰인 메모는 그 감동을 되새기게 만들었다. 짧은 기념식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손 내밀어 끌어당긴 것은, 뒤돌아 나가는 소형 씨가 아니었다. 소외된 광주에서, 한 맺힌 37년을 살아온 광주 시민이었다. 뒤따라온 대통령을 마주 안은 것은 '광주의 한(恨)'을 풀어 주려 노력하는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대통령이 묘비를 따뜻하게 어루만진 것은 "호남을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다.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실무 인력도 탕평 인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1일이 지났다. 호남 그리고 5·18은 그새 37년간의 애곡과 차별을 벗어 났겠다. 국무총리실은 "호남을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다.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만은 아직 부족하다. 진정으로 호남의 소외를 털어 내고 호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실질적 국가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호남 인재를 중용하고 호남에 대한 애국된 시선을 바로잡는 것이 '단순 산술 배분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틀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질적이고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선,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불균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는 건국 이래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호남 소외 등 역사적인 맥락을 감안해 접근해야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장·차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 배분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부서의 국·과장급 실무 인력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인재를 중용하는 것은 인사와 예산 등 국가 자원 배분 과정에서의 호남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과거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은편칼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



서미정 광주시의원

화(禍)의 근원은 비교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현 시국에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에는 광주 사회복지사협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 계기는 모호한 시정의 입장으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을 간략히 말하면 광주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국가에서 매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춰 줄 수가 없어 1~2년 후퇴한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시에서는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몇 년을 미뤘고 대신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 불만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 여름, 시에서는 전향적으로 2017년도부터 당해 연도 기준을 맞추겠다고 발표했고, 사회복지사들은 오랜 숙원 해결에 환영을 했다.

다육 정확한 현장 사정을 확인하고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기 위해 광주시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전수 조사를 했는데, 결국 해를 넘겨서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한 것이다.

광주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은 첫 번째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또 당해 연도 기준 적용을

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복지건강국장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3명의 국장이 가지는 정책을 대하는 온도차와 업무 파악을 위해 필요 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현역은 매년 자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월급 휴식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개선과 국·시비 시설 구분없는 보편적·통합형 정책 추진,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은 올해부터 당해 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며 7개 유형의 단일급여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정보시스템 활용 강화 등 4개 사업, 종사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등 2개 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등 4개 사업,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각 광역단체에서는 지역적 현황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데 광주시는 2013년 조례를 제정하고도 한 번도 3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근시안적인 계획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계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전

향적인 광주시의 발표를 환영한 만큼 예산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광주시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당해 연도 기준 준수와 복지 수단 마련 등 기존의 합의된 문제 내에서 먼저 답을 찾지 않고 오랜 숙원의 문제를 연결시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면 협의의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3개년 계획 미수립에 대한 광주시의 유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의 성과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졸속한 계획안을 받아 새로운 시뮬거리를 찾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계의 여론도 수렴되지 않은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내라는 것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추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고 또 늘어난 보수만큼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광주시사회복지처우개선연대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인 광주시 사회복지계의 당면 과제임은 충분히 알고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또 그만큼 훌륭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기획안이 만들어지도록 기다리겠다. 지난겨울이 없었으면 이번 봄도 없었을 테니까.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계속되는 '파격' '여성 배려' '탕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지난 22일 경제부총리 등의 인사를 발표한 이후 내각 인사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엔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 후보자 3명의 위장전입 의혹 문제로 인사 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진 이후 조각에 속도 조절을 해 오던 차에 이번 인사 발표를 재고했다. 따라서 이제 초대 내각 조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탁된 인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다. 때문에 국회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인사의 속도를 내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날 인사는 지역 안배와 여성 배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서 대체로 호평을 받는 분위기다. 김부겸 의원은 경북, 김영춘 의원은 부산, 김현미 의원은 전북, 도종환 의원은 충북 출신이다. 김현미 의원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의 '파격 인사'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첫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관점에서 이날 인사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 출신 문체부 장관을 기대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물론 도종환 후보자의 경우 시인 출신답게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광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대선 공약 지역 현안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 지역 핵심 대선 공약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 동안 소외됐던 광주·전남의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광주·전남 핵심 공약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 벨리 조성을 내놓았다. 광주 핵심 공약으로는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을 제시했다. 전남 핵심 공약은 첨단과학기성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약 사업의 조기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선 공약을 확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반영을 요구키로 했다. 광주시가 확정한 3대 핵심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미래형 자동차 부품사업,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 등 모두 12개 공약 24개 세부 사업에 예산을 15조900억 원으로 잡았다. 전남도는 10개 공약 48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고 16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정부 때에 비해 각각 2~3배가량 늘어난 예산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인사는 물론 정책과 예산에서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호남의 아픔을 고려한 이번에는 광주·전남에서 요구한 현안 사업들이 국책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광주와 전남 모두 20%에도 못 미친 만큼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시한 여러 가지 호남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거는 호남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화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無等鼓

'전환 북부'라 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대선 경찰청에 소속돼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을 전경과 의경이라고 한다. 경찰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경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 가운데 다수 차지한다. 의경은 지원을 통해 경찰청이 직접 선발한다는 점이 다르다. 말은 역할도 전경은 창설 당시 대간첩작전을 수행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반면 의경은 방범이나 교통 지도 등 상대적으로 수월한 치안 업무 보조를 맡았다.

하지만 전경 제도가 시행 44년 만인 2013년 폐지되면서 대선 의경

이 같은 모순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가 더해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날로 무너지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포식자와 약탈자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사회적 양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돼 20·30대 젊은이들은 '3포세대' '5포세대'로 전락하고 있고,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민법 채권권 개정 등을 통해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류층의 불공평 독을 서둘러 복구하고 아울러 하류로 떠내려 온 사람에 대한 구제노력인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경 제도

문재인 정부가 2023년 9월까지 의경을 모두 없애고 대선 경찰관 2만

명을 더 뽑기로 했다. 현직 의경 수는 2만5000여 명으로 전체 경찰 인력(13만명)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 일자리 확충 공약에 따른 조치로 의경 자리가 경찰관을 충원하게 되면 치안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유력 인사들의 특혜 의혹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다만 폐지될 때가 지 6년 동안 더 치열해질 경찰들과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유력 인사들의 입김을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기고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시작으로 '담보법' '계약법' '분양주택매매법' '근로계약법' '특허법' '식품안전법' 등을 거쳐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중국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손해액의 3배로 제한하다 보니 2011년도에 도입한 하도급법의 경우 실제 적용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우리의 옛부터 법에는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해야 했다. 영·미법에서는 대부분 손해배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3배로 제한하다 보니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용인해 버린다.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국가의 갑질행위' 또한 사라져 최순실과 부억자들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았을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으로 일환으로 추진하다가 기득권층의 반대로 무산된 민법 채권권 개정을 통한 영·미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나 재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인,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불법 반칙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회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북유럽처럼 신뢰사회가 구축되면 연 4%의 경제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우리는 누누이 접한 바 있거니와 이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적 양극화는, 경제·사회분야의 '생활양식'과 '생활규범' 즉, '경기진행' 방식과 '경기규칙'을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이후 IMF 경제위기와 FTA협상,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거치면서 영·미식 생활양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됐다. 국민의 주택·교육·고용·의료 등의 경제사회생활 즉, '경기진행'이 비교적 자율적이면서도 공정성을 중시하는 영·미식으로 하게 되었다면, '경기규칙' 또한 반칙을 했을 때 자술에 맡기는 대신 손해액의 수십, 수백 배를 물리는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주택·교육·고용·의료 등을 국가가 주로 책임지며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심한 경제사회생활 즉, '경기진행'을 대륙식으로 하게 하였다면, '경기규칙' 또한 반칙을 했을 경우 징벌적 아닌 순수 손해액만 물리는 대륙식 '실질손해배

상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이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점점이기도 하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경기규칙'대로 하더라도 그 과실이 상위 5% 내지 10%에 몰리게 되는데, 불법 반칙까지 가능하다면 그 경계는 극심하게 기울어져, 경제·사회생활에서의 경기진행 즉, 경쟁은 이미 끝났 것이다.

지배세력의 무능과 분열로 나라를 잃은 결과 우리의 옛 부여법을 지키지 못했고, 더욱이 일제가 남기고 간 법과 제도의 미칭산으로, '경기진행' 방식과 '경기규칙'을 아직까지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가 더해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날로 무너지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포식자와 약탈자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사회적 양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돼 20·30대 젊은이들은 '3포세대' '5포세대'로 전락하고 있고,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민법 채권권 개정 등을 통해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류층의 불공평 독을 서둘러 복구하고 아울러 하류로 떠내려 온 사람에 대한 구제노력인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사 회 사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